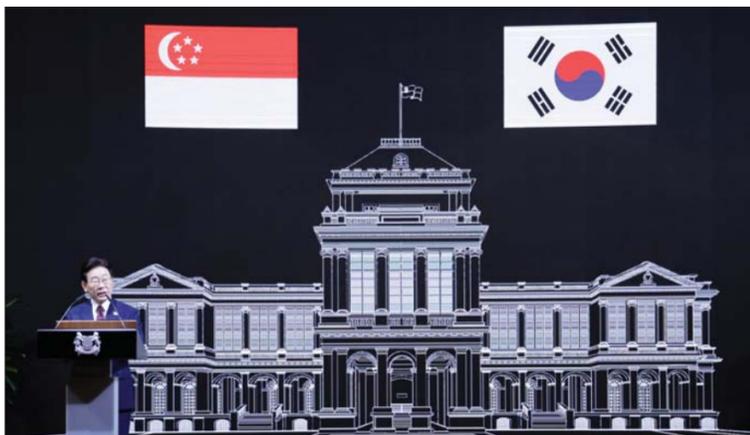


싱가포르와 중견국 연대 본격화... “자유무역·AI 공조 강화”

인적자원으로 성장한 공통점 가져
20년 변화에 맞게 FTA 개정 추진
‘AI 주권 확보’ 공동 목표 공유
미래분야 기술교류 확장 MOU 체결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싱가포르 방문은 국제 정세가 불안한 가운데 양국이 ‘중견국’의 역할을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또한 한국과 싱가포르는 제한된 자원·지정학적 요인 등을 극복하고 성장한 공통점이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국은 전통적 협력 분야를 포함해 인공지능(AI) 등 첨단 분야까지 협력 범위를 넓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국민 자격으로 싱가포르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을 통해 이 대통령은 싱가포르의 타르만 산무가라트남 대통령, 로렌스 왕 총리를 모두 만났다. 특히 이 대통령과 왕 총리는 지난 2일 정상회담을 갖고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 개시에 합의했다. 이 대통령과 왕 총리는 지난해 11월 양국 수교 50주년을 기념



싱가포르를 국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일(현지 시간) 한 호텔에서 열린 타르만 산무가라트남 대통령과 국민만찬에서 담사를 하고 있다. /뉴스시

해 한국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후 4개월 만에 다시 만났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오늘날 초불확실성 시대의 격랑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며 신뢰할 수 있는 진정한 동반자가 더욱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의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국제 정세가 한층 불안정해진

상황을 감안해, 한국과 정서적·경제적으로 밀접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특정 국가에 의존할수록 현재와 같은 정세에 민감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그래서인지 이번 회담을 통해 양국은 FTA를 개선하기로 합의했다. 한국과 싱가포르는 2006년 FTA를 체결했다.

20년간 변화된 환경을 반영해 FTA를 개정하려는 취지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 이후 자유무역 체제가 붕괴된 상황에서, 아시아의 중견국끼리 자유무역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번 이 대통령의 국민방문에서 가장 강조된 분야는 AI다. 한국과 싱가포르는 미국과 중국에 이어 ‘AI3강’ 후보국으로 함께 꼽힌다. 양국은 미중 AI 독점 구도에 맞서 AI 주권(소버린 AI) 확보라는 공동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 특히 싱가포르는 AI 준비력과 교육·안전·인재 정책에서 세계 최상위 평가를 받는 국가다. 이 때문에 양국 협력의 고리를 AI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 대통령도 지난 2일 양국의 정부·기업·학계 관계자가 모인 ‘AI 커넥트 서밋’에 직접 참석해 한국과 싱가포르의 전략적 동맹을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양국이 부족한 부분을 매우며 협업하면 개별 영역에서는 얼마든지 선두권을 형성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다”고 말했다.

양국 정부는 이날 AI 산업과 그 기반

이 되는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에너지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우주·양자 등 미래 분야까지 기술 교류를 확장하는 내용의 MOU(양해각서)도 체결했다. 싱가포르는 AI에 필요한 전력을 만들기 위해 SMR에 관심을 두고 있다.

이외에도 이 대통령과 왕 총리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부동산·저출산·인구구조 변화·AI가 가져올 변화 및 준비 방향·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 등 양국 공통 과제에 대한 정책 토론도 했다. 이는 국토가 좁고 자원이 적음에도 인적자원으로 중견국으로 성장한 양국이 서로 비슷한 점이 많아서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거기에도 이 대통령과 왕 총리는 현 국제정세를 ‘초불확실성 시대’라고 규정하며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규정했다. 이제 중견국으로서 양국은 ‘힘이 곧 정의’가 된 국제정세 속에서 생존하고 발전하기 위해 양자·다자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싱가포르=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metro

“필리핀, 동남아 첫 수교국”... 협력분야 확대

한-필리핀 정상회담

수교 77주년... 원전·조선 등 논의

3박4일 일정으로 동남아시아를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3일 국민 자격으로 필리핀 마닐라에 도착해 정상회담을 가졌다. 필리핀은 우리나라의 전통적 우방국으로, 이번 회담을 통해 미래 유망 분야 협력도 확대했다.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현지시간으로 이날 오후 12시50분쯤 필리핀 빌라모어 군공항에 도착했다. 공항 환영식에는 필리핀 측에서 프란시스코 티우라우렐 농업장관과 안토니오 갈라라도 칼릭스토 파사이시 하원 의원 등이 나왔으며 우리 측에서는 이상화 주필리핀 대사 부부와 윤만영 재필리핀한인총연합회장이 참석했다.

이후 이 대통령은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즈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대통령과 마르코스 대통령은 지난 10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와 경주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가졌던 정상회담 이후 약 4개월 만에 재회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과 마르코스 대통령은 정상 차원의 활발한 교류를 지속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필리핀에 도착한 3일은 수교 77주년을 맞는 날이다. 위 실장은 “우리나라는 동남아시아 최초 수교국이자 아시아 최초 최대 규모 한국전쟁 참전국인 필리핀과의 역사적인 유대 및 우정에 기반하여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담에선 양국은 통상, 인프라, 방산 등 분야에서 그간 이뤄져 온 협력을 심화하고 원전, 조선, 핵심광물 등 미래 유망 분야로 협력의 지평을 넓혔다.

마르코스 대통령과의 회담에 앞서 이 대통령은 필리핀에서 국부(國父)로 추앙받는 독립운동가 호세 리잘의 기념비를 찾아 헌화했다.

한편 필리핀 방문 2일차인 4일, 이 대통령은 첫 일정으로 마닐라 영웅묘지내에 한국전쟁 참전 기념비를 찾아 헌화하고 생존 참전용사와 후손들을 만났다.

이어 이 대통령은 한-필리핀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양국 기업인들을 격려한 뒤 동포들과 오찬 간담회를 끝으로 3박4일 간의 동남아시아 순방을 마무리한다. /필리핀(마닐라)=서예진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등 참가자들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민주헌정 수호 국민대장정 도보투쟁' 출정식을 마친 후 국회를 나서고 있다. /뉴스시

국민의힘, ‘사법 3법’ 저지 장외투쟁

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 요청

국민의힘이 또 다시 장외투쟁에 나섰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사법 3법(법외국죄·재판소원제·대법관증원법)’의 위헌성을 알리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하기 위해서다.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등 지도부를 비롯한 당 소속 의원 70여명과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이날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사법독립 헌정수호’를 위한 대국민 호소 국민 대장정 규탄대회’ 출정식을 열었다. 이후 국회에서 청와대까지 도보 행진을 했다. 여당의 입법독주와 사법 3법의 폐해를 알리는 여론전을 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장 대표는 출정식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장기 독재의 꿈을 버리고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사법과 3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재명 정권은 스스로를 국민 주권 정부라 부르면서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며 “사법과 3법은 결국 이재명 독재 공화국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유와 독재는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어, 우리가 독재를 막아

내지 못하면 권력이 우리의 자유를 박탈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여러분들이 국민의힘에 바라는 건 당대표를 중심으로 하나로 뭉쳐서 제대로 싸우고 제대로 헌정질서를 지켜내는 것”이라며 “저도 맨 앞에서 싸우겠다. 끝까지 싸우고 또 싸워서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법치를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이기는 방법을 알고 있다. 하나의 목소리로 싸우는 것”이라며 “우리가 지금 내고 있는 각자의 목소리가 대한민국의 자유와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데 동의한다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저와 국민의힘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의 목소리로 뭉쳐 싸울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회 다수당을 앞세워 야당을 완전히 배제하고 국회를 장악한 채 입법부의 힘으로 사법부를 완전히 파괴하고 있다”며 “막아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막기 위해 열심히 했다. 그러나 힘이 부족했다. 독재는 이미 시작됐다. 이걸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바로 국민 여러분의 힘”이라고 했다.

/서예진 기자·김보민 인턴기자

“공공분양 채권입찰제·재판매가 제한 제안”

여당 주최 토론회서 제도 개편 논의

정부가 공공분양 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여당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채권입찰제, 시세차익 가산, 토지임대부, 재판매가 가격 제한 등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공공분양 제도 설계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후인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3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이연희·북기왕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공공분양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란 주제의 토론회에서 새로운 공공분양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공공분양주택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되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시장에서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결국 가격이 시세 수준으로 상승하고, 공공이 조성한 택지의 개발 이익이 과도하게 사유화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8월 출범한 LH개혁위원회는 새로운 공공분양 유형 도입을 검토 중이다.

이후인 교수는 공공분양 제도 설계의 구체적 적용방안으로는 채권입찰제, 시세차익 가산, 토지임대부, 재판매가 가격 제한 등 4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채권입찰제는 분양가와 시세 차이만큼 소비자가 주택 채권으로 매입하고 매입액이 높은 순서대로 입주장을 선정하는 방식이다. 매입상한이 존재하지만 채권 매입에 따라 자기부담이 상승한다. 시세차익 가산은 분양가와 시세 차

이값을 분양가 상한제 가격 가산비 항목으로 신설해 기존 분양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분양하는 제도다. 토지임대부는 국가가 토지를 소유하고 건물만 민간에 분양하는 방식, 재판매가 가격 제한은 분양 이후에도 매매가격을 계속 제한하는 방식이다.

이 교수는 재판매가 가격 제한과 관련해 “시세의 80%로 분양했다면 판매할 때도 시세의 80%로 거래하도록 해야 한다”며 “공공이 관리하는 판매 체제를 별도로 만들어서 무주택자들에게만 시장 가격 80%로 판매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만 모든 논의는 정책 수요자의 수용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이 교수는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공공주택 공급이 일관성 있게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보민 인턴기자 kbm@